

제53호(2013.3.28)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

김 용 렬 정 학 균 민 자 혜

1. 조사 분석의 개요	3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4
3. 시대 변화를 반영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설정	6
4. 지불의사(WTP) 기법에 의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9
5. 요약 및 시사점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용렬 연구위원	02-3299-4362	kimyl@krei.re.kr
감 수:	김태곤 연구위원	02-3299-4241	taego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다원적 가치(multifunctionality)의 개념과 일맥상통함.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경관유지 등 비생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 활용할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였음. 5개 영역(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식량안보), 21개 가치항목을 선정하였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및 지불의향은 예비조사와 가치평가조사로 이루어졌음.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7,721원, 경관 및 전통 7,235원, 국격제고 4,113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 4,638원, 식량안보 4,970원임.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조사를 위해 영역별 제시금액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였음.

공익적 가치 조사에서 각 영역별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전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민들의 지원금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특별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국격제고 기능을 제외하면 지불의사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가 67.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원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전체의 52.4%가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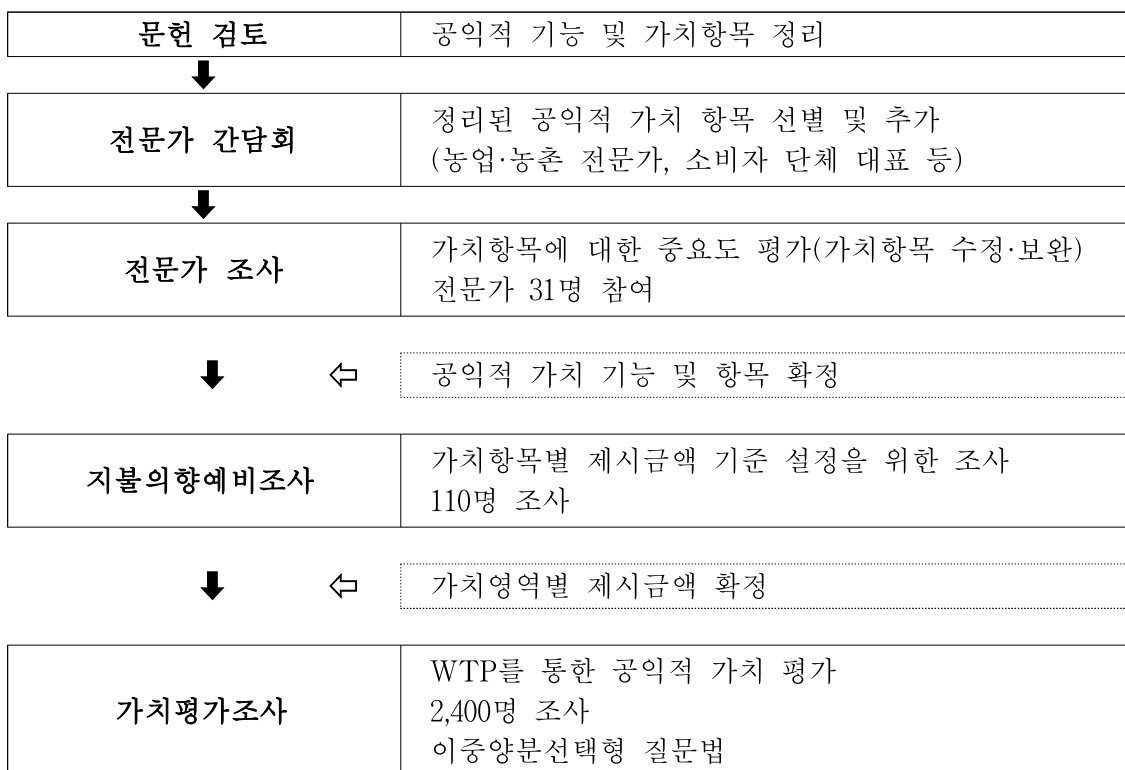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는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음. 추정결과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임.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농업·농촌계의 공급자 입장에서 추정된 가치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수요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임을 감안하여야 함. 현재의 직접지불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충이 요구됨.

1. 조사 분석의 개요¹⁾

□ 일반 국민들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해 단계별 접근 시도

- 국내외 문헌검토 후 전문가간담회 및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범주화함
- 지불의향예비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준가격을 도출하였음
- 국민 2,400명을 대상으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을 통해 지불의사를 파악하였음
- 국민의 지불의사 조사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함

표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흐름도



* 본 내용은 농촌진흥청 용역과제로 수행한 「시대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재조명」 연구 결과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임.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개념과 상통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농촌의 생산적 기능 이외에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함
 -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경관유지 등 비생산적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야 함

□ 인지도는 높으나 지불의사는 낮아지는 추세

- 대체로 인지도가 90%를 상회하며, 2011년 연구에서는 94%까지 증가
- 지불의사는 낮아지는 추세로, 세계경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실물경제 또한 위축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인지도 및 지불의사 변화

연 구	연 도	인지도(%)	지불의사(%)
박대식 외	1999	-	68.4
안윤수 외	2003	90.3	-
김동원 외	2006	90.4	52.8
김동원 외	2007	87.3	39.1
김동원 외	2008	92.0	40.5
김동원 외	2009	91.7	50.3
황정임 외	2009	94.1	38.2
김동원 외	2010	91.6	59.7
김동원 외	2011	94.0	52.7
김용렬 외	2012	-	48.5

□ 향후 중요시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중 식량안보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가치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음
 - 최근 들어 자연환경보전기능이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표 3. 향후 중요시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변화

김중숙 외(1994)		농민신문(1997)		박대식 외(1999)		오세익 외(2004)	
공익적 가치	중요도	공익적 가치	중요도	공익적 가치	중요도	공익적 가치	중요도
자연환경과 국토보전 유지	41.4	국민의 식량 공급	37.4	식량의 안정적 공급	61.3	식량의 안정적 공급	29.5
쾌적한 생활 휴식처 제공	17.3	국토의 균형 발전	27.3	자연환경의 보전	48.1	자연환경의 보전	27.9
국민식량공급	16.9	자연환경의 보전	16.8	국토의 균형발전	30.2	전원생활의 공간	13.3
국가전체사회의 안정 조성	9.2	전통문화의 공간	5.5	전원생활의 공간	26.7	국토의 균형발전	12.1
타산업 발전에 기여	6.6	전원생활의 공간	4.7	전통문화의 계승	17.2	관광 및 휴식의 장소	9
기타	3.1	타산업에 노동력 공급	4.6	관광 및 휴식의 장소	13.5	전통문화의 계승	8.1

김동원 외(2007)		김동원 외(2009)		김동원 외(2011)		본 연구(2012)	
공익적 가치	중요도	공익적 가치	중요도	공익적 가치	중요도	공익적 가치	중요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36.1	식량의 안정적 공급	48.2	식량의 안정적 공급	32.2	식량안보	1위
국토의 균형발전	22.8	자연환경의 보전	15.8	자연환경의 보전	19.6	환경보전	2위
자연환경의 보전	13.7	국토의 균형발전	13.6	국토의 균형발전	13.5	경관 및 전통	3위
전통문화의 계승	11.4	전통문화의 계승	9.3	전통문화의 계승	10.8	사회경제	4위
전원생활의 공간	7.8	관광 및 휴식의 장소	7.8	관광 및 휴식의 장소	12.1	국격제고	5위
관광 및 휴식의 장소	8	전원생활의 공간	5.3	전원생활의 공간	12.4		

3. 시대 변화를 반영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설정

3.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영역과 항목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영역 및 항목 설정

-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가치항목들을 분석하였음
- 최종적으로 5개 영역(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식량안보), 21개 가치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4.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영역 및 항목

영역	가치 항목	항목의 세부내용
환경보전	• 수자원 함양	- 지하수 자원 보전, 하천 유량 조절
	• 수질정화	-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 방지, 토양 미생물 분해, 농촌지역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 홍수조절	- 호우 발생 시 빗물 저장 기능
	• 대기정화 (기후변화완화)	- 맑은 공기, 이산화탄소 고정 및 흡수, 산소 배출 - 국산 농산물 소비를 통한 저탄소사회 실현
	• 기후순화	- 여름철 대기 냉방효과, 옥상텃밭 등 도시 냉방효과
	• 토양유실 방지	- 호우 발생 시 경작물이 빗물 흡수
	• 생물다양성 유지	-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 희귀종의 서식지 - 자연친화적 농업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 농업·농촌 경관	- 전답, 마을, 야산 등의 자연적인 경관 제공
	•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 지역문화 보전, 전통문화 예술 활동의 모태 - 전통문화 및 전통적 가치관 계승 - 전통 식문화 보전 및 활용
	• 휴양 및 여가공간 제공	- 여가활용 공간 제공
	• 치유(힐링), 건강기능	- 치유의 숲, 도시민의 심리적 안정, 아토피 치료, 청소년 정서 순화 - 각종 의약품 원료 제공
국격제고	• 국가 매력도 제고	-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농촌경관이나 전통 유지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홍보 및 전파
	•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기여	- 국제 기금 해결, 새마을 운동 등 농업·농촌 모범사례 제공

영역	가치 항목	항목의 세부내용
지역 사회 유지 및 사회 경제 적 기능	• 농촌지역의 일자리 제공	-농업·농촌 관련 일자리 제공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 실업 완화
	• 농촌경제 유지	-농업 및 농업 연관산업 지역 내 입지 -지역농산물 공급과 로컬푸드 발전 -비농업부문의 유입, 중소형 관광자원
	• 교육기능	-생태계 직접 보고 체험, 농산촌 유학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양식 학습
	• 지역사회 유지	-공동체, 커뮤니티 유지 기능 -지역 내외 교류
	• 도시문제의 완화	-도시의 인구과밀, 주택, 교통, 환경오염 등의 문제 완화
	• 국토관리	-원격지·오지 마을 유지를 통한 국토관리
식량 안보	•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유지 -식량가격의 불안정성 완화 -식량자급률 유지 및 향상
	• 식품의 안전성 보장	-신선농산물, 고품질 안전농산물 제공

3.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예비조사

□ 예비조사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함
- 2012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20세~59세 남녀 총 110명 대상
- 응답 결과, 각 가치 항목별 평균금액은 환경보전 7,721원, 경관 및 전통 7,235원, 국격제고 4,113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 4,638원, 식량안보 4,970원으로 분석됨

표 5. 예비조사 응답결과

구분	평균(원)	표준편차(원)	최솟값(원)	최댓값(원)	응답 수(명)
환경보전	7,721	13,027	-5,307	20,748	73
경관 및 전통	7,235	15,621	-8,386	22,856	43
국격제고	4,113	4,401	-288	8,514	23
사회경제	4,638	5,677	-1,039	10,315	42
식량안보	4,970	8,122	-3,151	13,092	54

주: 표에 제시된 최솟값과 최댓값은 제시된 금액에 표준편차를 뺀 금액 중 최솟값과 최댓값을 의미

□ 제시금액 설정

- 김강수(2009)에 따라 분포의 15~85%(70%)를 설정한다면 예비조사 응답결과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mu \pm \sigma$ 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약 68% 범위에 해당하므로, 제시금액의 범위는 위 표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의 값을 취하도록 설정하여 가치평가조사에서 활용하였음
 - 구간은 각 항목별로 7단계로 구분하였음
 - 최솟값은 최저 응답가격으로, 예비조사의 응답분포가 정규분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 이하 값의 간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하였음
 - 위의 평균금액을 바탕으로 영역별 제시금액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였음

표 6. 영역별 제시금액

단위: 원							
구 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7그룹
환경보전	2,000	3,000	5,000	7,000	9,000	13,000	21,000
경관 및 전통	1,000	2,000	4,000	7,000	10,000	15,000	23,000
국격제고	1,000	2,000	3,000	4,000	6,000	7,000	9,000
사회경제	1,000	2,000	3,000	5,000	7,000	9,000	11,000
식량안보	1,000	2,000	3,000	5,000	8,000	10,000	14,000

4. 지불의사(WTP) 기법에 의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4.1. 조사 개요

- 2012년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총 2,4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로 표본을 할당함
 - 설문지에서 각 가치영역별로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고,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사진자료를 2컷씩 제시하였음
 - 각 기능별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하였음
 - 설문지는 공익적 가치 항목에 대한 인식 및 지원금 지불의사 여부, 그리고 사전조사를 통해 설정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지불의사금액을 묻는 문항,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신의 응답에 대한 확신 정도를 묻는 문항, 태도변수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 그리고 사회통계변수로서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조건부 시장 설정을 위하여 지불수단은 세금 또는 기부금의 형태로 월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음
 - 질문형태는 실제와 가까운 소비자 잉여를 도출할 수 있다고 알려진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였음

4.2.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영역별 공익적 가치에 대한 현재 인식은 매우 높음

- 전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10% 미만이었음

- 식량안보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이 7점 척도 기준 6.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국격제고 기능은 4.91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7. 영역별 공익적 가치에 대한 현재 인식

구 분	전혀 가치 없다	가치 없다	별로 가치 없다	보통	어느 정도 가치 있다	가치 있다	매우 가치 있다	7점 평균	100점 환산
환경보전	0.0	0.2	1.0	6.7	22.5	37.8	31.9	5.92	84.57
경관 및 전통	0.2	0.5	3.5	16.6	33.1	30.4	15.8	5.36	76.57
국격제고	0.9	1.7	6.6	28.0	31.5	21.9	9.4	4.91	70.14
사회경제	0.1	0.2	2.3	16.2	34.1	32.3	14.8	5.40	77.14
식량안보	0.0	0.1	0.8	6.1	17.4	33.9	41.6	6.09	87.00

☐ 식량안보·환경보전 기능을 위한 특별부담금 지불 의사는 60% 이상

- 국민의 지원금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특별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기능에 대해 각각 68.5%와 64.1%로 응답하였음

표 8. 영역별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

구 분	내겠습니다	내지 않겠습니다
환경보전	64.1	35.9
경관 및 전통	41.7	58.3
국격제고	26.1	73.9
사회경제	42.0	58.0
식량안보	68.5	31.5

☐ 지원방안은 ‘정부출연금·보조금으로 기금 마련’이 가장 적절

-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에 67.9%의 지지를 보냄
- 반면 ‘유지·보전을 원하는 국민의 기부금으로 충당’은 11.7%에 불과하였음

표 9. 공익적 가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

구 분		사례 수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유지·보전 기금을 마련한다	유지·보전 세금으로 징수한다	유지·보전을 원하는 국민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기타
전체		2,400	67.9	16.9	11.7	3.5
성 별	남자	1,223	66.6	18.2	11.4	3.8
	여자	1,177	69.2	15.5	12.1	3.2
연 령	20대	509	67.8	16.3	13.8	2.2
	30대	630	67.0	17.1	11.6	4.3
	40대	680	69.0	16.6	11.0	3.4
	50대	581	67.8	17.4	10.8	4.0

□ 직접지불금 방식으로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찬성 61.7%

- 농업 생산 및 농촌에서의 거주를 통해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농촌거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직접지불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61.7%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접지불금 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표 10. 지원 방법으로서 직접지불금 방식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 수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전체		2,400	61.7	38.3
성 별	남자	1,223	61.3	38.7
	여자	1,177	62.1	37.9
연 령	20대	509	71.9	28.1
	30대	630	61.1	38.9
	40대	680	59.0	41.0
	50대	581	56.6	43.4

□ 지원금 납부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 없음’이 52.4%

- 지원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전체의 52.4%로 가장 높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0.8%에 불과하였음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11. 납부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

구 분		사례 수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제시 금액이 너무 커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농업·농촌과 관련있는 사람 단체가 보전해야 하므로	농촌의 환경 및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보전되므로	기타
전체		2,400	52.4	3.1	0.8	16.4	5.7	21.5
성별	남자	1,223	48.7	2.7	0.8	17.1	7.6	23.2
	여자	1,177	56.5	3.6	0.8	15.7	3.6	19.8
연령	20대	509	70.8	0.0	1.0	11.5	5.2	11.5
	30대	630	50.0	3.2	1.9	14.6	5.1	25.3
	40대	680	47.7	4.7	0.0	18.1	5.4	24.2
	50대	581	46.3	3.7	0.0	21.3	7.4	21.3

□ 향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환경보전 기능 90.7%, 식량안보 기능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가장 순위가 낮은 국격제고 기능에 대해서도 61.5%가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12. 미래의 영역별 중요성 전망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중요하지 않을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보통	다소 중요해질 것	중요해질 것	매우 중요해질 것	7점 평균	100점 환산
환경보전	0.1	0.3	1.1	7.8	24.7	36.5	29.5	5.85	83.57
경관 및 전통	0.1	0.4	2.3	19.4	36.0	29.9	12.0	5.28	75.43
국격제고	0.5	1.8	5.8	30.4	31.1	22.4	8.0	4.89	69.86
사회경제	0.3	0.5	2.4	20.1	35.8	29.7	11.4	5.25	75.00
식량안보	0.2	0.2	1.2	8.0	18.1	30.3	42.0	6.03	86.14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음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6.5%인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며,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중요성 인식

구 분		사 례 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 통	다소 중요	중요	매우 중요	7점 평균	100점 환산
전체		2,400	0.0	0.3	1.7	11.5	29.1	35.6	21.8	5.63	80.43
성 별	남자	1,223	0.1	0.4	2.0	11.2	27.6	36.3	22.5	5.65	80.71
	여자	1,177	0.0	0.1	1.4	11.9	30.7	34.8	21.2	5.62	80.29
연 령	20대	509	0.2	0.0	2.9	13.0	35.2	31.2	17.5	5.47	78.14
	30대	630	0.0	0.5	1.4	14.3	28.1	35.7	20.0	5.57	79.57
	40대	680	0.0	0.1	1.5	9.9	29.6	35.1	23.8	5.70	81.43
	50대	581	0.0	0.3	1.0	9.3	24.3	39.8	25.3	5.78	82.57

4.3. 지불의사 기법에 의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

□ 분석방법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계량화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 소비자가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금액을 추정하였음
 - 지불의사금액은 추정된 월 가격을 연 가격으로 환산한 후 2012년 기준 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평균값(Mean)과 중앙값(Median)으로 산출하였음
- 이중양분선택형 CVM에서 각 함수의 파라미터를 Log Logit Model로 추정

하였음

□ 지불의사금액은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

○ 국민이 기꺼이 농업·농촌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유지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표 14.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값과 중앙값으로 추정한 총 경제적 가치

구분	평균값(MEAN)			중앙값(MEDIAN)		
	지불의향가격(원)		합계 (억 원)	지불의향가격(원)		합계 (억 원)
	월	연		월	연	
식량안보	10,719	128,628	23,090	7,943	95,316	17,110
환경보전	9,381	112,572	20,207	6,108	73,296	13,157
지역사회 및 경제	7,575	90,900	16,317	5,501	66,012	11,850
경관 및 전통	9,098	109,176	19,598	5,206	62,472	11,214
국격제고	6,527	78,324	14,060	4,706	56,472	10,137
전 체	43,300	519,600	93,272	29,464	353,568	63,468

주: 합계는 2012년 현재 총 가구 수(17,950,675)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5. 요약 및 시사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항목 설정에서 식량안보 등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개념의 국격제고 등의 개념을 도입

○ 활용할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였음. 5개 영역(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식량안보), 21개 가치항목을 선정하였음

- 첫째, 환경보전 영역은 7개 가치항목으로 구성되었음. 가치항목들은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홍수조절, 대기정화, 기후순화, 토양유실 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등을 포함함
- 둘째, 경관 및 문화적 전통 유지 영역은 4개 가치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농업·농촌 경관,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휴양처 제공, 치유(힐링) 기능이 이에 해당됨
- 셋째, 국격 제고 영역은 2개의 가치항목들로 구성되는데, 국가 매력도 제고와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 기여로 가치항목이 구성되었음
- 넷째,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영역은 6개의 가치항목으로 농촌 지역의 고용촉진, 농촌경제 유지, 교육기능, 지역사회 유지, 도시문제의 완화, 국토관리로 구성됨
- 다섯째, 식량안보 영역도 2개의 가치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의 안전성 보장이라는 기능으로 가치항목을 구성하였음

□ 본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에 앞서 기준 설정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및 지불의향은 예비조사와 가치평가조사로 이루어졌음. 예비조사에서 각 가치항목별 평균가격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였음

-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은 환경보전 7,721원, 경관 및 전통

7,235원, 국격제고 4,113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 4,638원, 식량안보 4,970원임

-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조사를 위해 영역별 제시금액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제시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지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높은 편이나 지불의사는 낮아지는 추세이며, 식량안보 기능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높게 평가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90%를 상회하며, 2011년 연구에서는 94%까지 증가하였음
- 지불의사가 낮아지는 요인은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실물경제 또한 위축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가치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기금 마련'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납부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

- 가치평가조사에서 각 영역별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전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가 67.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세금으로 징수한다'가 16.9%로 나타났다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원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전체의 52.4%가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농업·농촌과 관련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보전해야하므로'가 16.4%를 차지하였음

□ 국민이 지불하고자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

-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농업·농촌계의 공급자 입장에서 추정된 가치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수요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임을 감안하여야 함
 - 농업·농촌계의 공급자 입장에서 추정할 때, 특히 환경보전 기능과 같은 경우 대체법을 많이 사용함. 이러한 경우는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체법을 활용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결과들은 지불의사 기법을 통해 산출된 가치보다 훨씬 큼
 - 엄기철 외(1993)는 논·농지의 공익기능을 총 26조 9,814억 원, 오세익 외(2001)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총 10조 673억 원, 서동균 외(2003)에서는 농업적 다원적 기능을 총 19조 8,896억 원, 강기경 외(2008)의 경우는 농업의 환경적 공익 기능을 총 67조 6,632억 원, 양승룡 외(2011)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총 252조 원(산업적 가치 86조 원, 다원적 가치 166조 원)으로 추정하였음
 - 일본의 경우, 일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주)미쓰비시종합연구소(2001)는 총 82,226억 엔(약 108조 4,265억 원)으로 추정하였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발전을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형 직접지불제도의 확충 필요

- 농업·농촌 부문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 2012년 직접지불제 예산은 1조 4,948억 원이었음
 - 이 가운데 공익형 직접지불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506억 원(3.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436억 원(2.9%), 경관보전 직접지불 76억 원(0.5%) 등 총 1,018억 원(6.8%)으로 나타남

-
-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이 평가하는 농업·농촌부문 공익적 가치에 비해 직접지불금은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직접지불금을 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식량안보, 환경보전, 경관 및 전통, 사회경제, 국격제고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농업·농촌의 공익형 직접지불금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농업·농촌의 공익형 직접지불금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농업·농촌을 더 많이 향유하고 즐기므로써 국민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헌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송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송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3. 27

발 행 2013. 3. 28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49-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